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범죄 악용 우려”

전국 선도사업 선정, 진행 10%
민간·지자체 주도 정비 76곳
허영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을”



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총 322곳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53곳(47.5%)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전체기간이 2년 이상된 것을 말한다.

광주·전남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각각 9곳, 15곳이다. 이 중 광주 4곳과 전남 8곳은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중 실제로 정비를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했으며,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 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76곳이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

당사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의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과 청소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5월 광주의 한 장기건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이 담력시험을 위해 무단 침입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

질 않고 있다. 이처럼 방치건축물로 인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치건축물이 법적 분쟁과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정비계획 추진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단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3차 실태조사(2022년 5월-9월 진행)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 사업 주관기관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전남대 용지 수초제거
여름내 무성히 자란 수초 등으로 뒤덮였던 광주 전남대 용지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19일 오전 수초 제거용 특수선박을 이용,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간 1천억원

조은희 “선제 대응체계 구축해야”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5,156건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99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17만1,122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720억원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2,290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 피해액은 538억원을 기록했다. 광주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17년 207건, 2018년 205건, 2019년 358건, 2020년 1,014건, 2021년 624건이다.



전남은 2,86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현장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도교육청 부교육감 한달 넘게 공석

중앙정부와 소통 차질 우려

한달 넘게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공석으로 비워 있어 중앙정부와의 소통 차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김천홍 전 부교육감이 교육부 대변인으로 이동한 이후 후임 부교육감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김정희 도교육청 정책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 공석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선태부 부교육감이 떠난 이후 50여일 공백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신임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공석은 지난 2016년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교육감은 그동안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또 전국 부교육감 논의 등에 참석해 교육청의 건의사항 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도교육감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며 교육청을 이끈다. 조옥현 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2)은 “부교육감은 교육부 등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 정책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2023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회와 소통하고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부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인사가 지체되고 있어 2급 부교육감도 미뤄지고 있다”며 “전남을 비롯해 세종·경기·충북도교육청 등 4곳의 부교육감이 공석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PC방 동업자에 흥기 휘둘러 구속 송치

수익금 갈등...살인미수 혐의

PC방을 함께 운영하다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자 동업자에게 흥기를 휘두른 남성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영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1)와 지인 B씨(4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4일 오후 9시쯤 영암군 삼호읍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동업자 C씨(51)에게 흥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휘두른 흥기에 C씨는 오른팔을 다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3년 전 PC방을 함께 운영하다 수익금 분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뒤 이들에 대한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영암=최복섭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 01 **화장실 칸막이**
-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 03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